

규제프리존 도입, 빠를수록 좋다

濟州發展研究院長 姜 起 春

2015년 10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역별 특화산업을 상향식으로 설정하고, 관련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이 제안되었고, 2015년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이 발표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는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 지정, 규제프리존에 적용할 규제특례, 민간투자 촉진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발의로 지난 3월 24일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국가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도 있고 산업 경쟁력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즉, 국가발전의 두 축은 산업발전과 지역발전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앙티폴리스, 중국의 중관촌 등은 지역발전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한 때 우리나라의 빠른 정책화를 부러워하던 일본은 20년간 계속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동인으로 한 국가전략특구를 2014년 3월부터 도입하여 9개 도시권을 지역거점으로 조성하였다.

규제프리존이란 14개 지자체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정한 27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해당지역 해당산업에 한해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A지역 B산업에 한해 투자, 기술개발, 창업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인재유입→지역 경쟁력 강화→국가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은 몇 가지 면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별성이 있다. 첫째, 규제프리존은 지역과 중앙의 상생협력 모델이다. 지역에서 원하는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하면 중앙에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구도이다. 둘째, 규제프리존은 지역과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고, 산업 간 유사성과 보완성을 고려한 융복합 모델이다. 기존의 정책들은 산업 간에 다양하게 얹혀 있는 융·복합 분야의 규제완화를 고려하지 못한 반면에 규제프리존은 융·복합·신산업에 대한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설계하고 있다. 셋째, 규제프리존은 지속적인 규제혁신이 가능한 확장 모델이다. 전국적 규제완화 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베트이며, 테스트베드에서 성과가 확인되면 규제특례의 전국적 확산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 한국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정책시차를 고려할 때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두 자리 수의 고도경제성장에서, 1990년대 및 2000년대는 4%대 저성장으로 급락하였고, 2010년 이후 2%-3%대의 초저성장에 머물고 있다. 국가경제가 초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 지역 간 성장격차는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저성장→인적자본 쇠퇴 및 유출→저성장의 악순환 구조로 지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 및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민생법안이며 경제활성화 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역경제 회생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규제프리존이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등소평의 24자 방침에 냉정관찰(냉정하게 지켜본다)이 있고 중국의 외교정책에 유소작위(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가 있다. 각 지자체가 냉정관찰과 많은 논의를 거쳐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최적의 규제 개선안을 만들었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정책에 골든타임이 있듯이 규제 개혁은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때마침 정치권이 원칙적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합의를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으니 19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유소작위로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